



행자부가 최근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에 포함된 빛고을 CC와 빛고을CC 운영 수익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건강타운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빛고을CC·상무골프연습장 매각 땀 노인타운·염주수영장 운영 중단 위기

행자부 “이달 내 매각계획 제출”  
빛고을CC 연 3~4억원씩  
노인건강타운 운영비 지원  
상무골프연습장은 연 7억원  
공공체육시설 적자 보전  
운영주체 광주도시공 ‘골머리’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 대상에 빛고을CC(9홀)와 상무골프연습장을 포함시키면서<광주일보 9월 25일자 2면> 운영주체인 광주도시공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두 곳의 체육시설은 운영 수익금으로 각각 노인건강타운과 공공 체육시설의 적자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민간에 매각될 경우 지원 대상 시설의 재정악화와 운영 위축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24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광주시의 빛고을CC와 상무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지방 공기업 민간이양 사업 23개를 확정했다.

그러나 민간이양 사업에 포함된 광주 빛고을CC의 경우 운영 수익금의 60%를 노인건강타운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개장이후 지금까지 매년 3~4억원 씩 총 22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노인건강타운의 재정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골프연습장 또한, 매년 7억원 가량의 운영 수익금을 실내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적자 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공공 체육시설의 적자 비중으로 인한 운영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염주 실내수영장 등은 상무골프연습장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초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에 빛고을CC와 상무골프연습장 뿐만 아니라 염주 주차장과 황금주차를 포함했지만, 광주도시공사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주차장 2곳은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 측은 빛고을 CC와 상무골프연습장도 민간이양 대상 사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수

차례 행자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행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민간이양이 확정된 두 시설에 대해 매각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10월말까지 행자부에 사업매각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임정완 광주도시공사 미래전략실장은 “행자부 지침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 다각적인 고민과 연구를 해볼 계획”이라며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쫓겨’ 된 ‘공돈’  
공적자금 빼들리기 심각 ▶6면  
‘헬멧2·글러브3’ 고영우 ▶20면



유라시아 대장정 - 상트페테르부르크 ▶18면

## ‘안심번호’ 거센 후폭풍 與野 계파갈등 폭발 직전

여, 靑·친박 “민심왜곡 쿠데타”  
야, 비노 “친노에 유리한 제도”

추석 연휴중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활용 국민공천제’를 놓고 여야 모두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공천 주도권을 놓고 계파간에 대결하는 양상이어서 정치권이 거센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3면>

여권의 경우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국회법 개정안 파동’에 이어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계의 갈등이 또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비주류층 중심으로 반발이 흘러 나오면서 공천혁신안에 이어 계파갈등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날 새누리당은 오전 당 지도부회의와 오후 의원총회에서 계파 간에 충돌했다. 김 대표는 합의안에 대해 “최종 합의안도, 야당의 안도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친박계 의원들은 불만을 표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친박과 비박계가 각자 자기 주장만 하면서 안심번호 공천제 수용 여부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당내 ‘공천 제도논의 특별기부’를 설치키로 하고 계속

논의키로 했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나서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등이 우려된다”며 “김 대표가 공천 쿠데타를 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여권 전체가 들쭉거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주류 측은 새누리당 친박계를 향해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오픈프라임머리에 비해 동원 경선의 폐단을 없애고 비용을 크게 줄이는 훨씬 합리적인 공천 방식”이라며 “새누리당 일각에서 탄소를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당내 비주류 측에 대해서는 “야당 혁신안에 이미 포함된 사안”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비주류 진영에서는 “친노(친노무현)·주류진영에 유리한 제도”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며 문 대표의 합의 내용을 비판하며 “안심번호제도는 일종의 모바일 투표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이날 트위터에서 “안심번호는 안심 못하는 ‘불안심 번호’입니다. 국민공천제 찬성하지만 안심번호제 반대합니다”라고 썼다.

/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남 내년 교부세 474억 줄 듯

인구감소 영향...재정난 가중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남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축 등 패널리티가 구체화되고 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남도의 국고 지원이 줄면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의한 지역경쟁력 쇠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30일 “행정자치부가 복지수요가 크고 재정건전화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교부세 지원을 늘리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2016년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그 용도나 재원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올해 전남도는 22개 시·군 포함 4

조4708억원의 교부세를 받았으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2015년 교부세의 1%에 해당하는 최고 47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균형수요’를 감안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 이를 반영시켜 당장 내년에는 교부세 감축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인구 감소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줄이겠다는 기본 방침을 정한 만큼 전남도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남도 인구는 지난 2004년 199만4011명으로 200만명선이 무너진 이후 지난 8월말 현재 190만3609명으로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 2010년 20.9%, 2012년 21.7% 등 2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7.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6km/ℓ (도시연비: 6.7km/ℓ, 고속도로연비: 9.1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36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